

# 안정유지 주체는 국민여러분

## 비상계엄해제에 즈음한 담화

1981년 1월 24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금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걸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을 1981년 1월 25일 0시를 기하여 전면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79년 「10·26사태」 이래 지속되어왔던 국가의 위기적 상황이 국민 여러분의 합심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되어, 이제 사회 전반의 안정기조가 충분히 회복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5공화국의 초석을 정립하는 대통령선거 등을 실시함에 있어 공명정대한 자유분위기를 보장하려는 뜻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불편을 참으면서 계엄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그 동안 계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국군장병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10·26」 비상사태에 이어 지난해 우리 사회에 가득 찼던 극한대립과 선동, 혼란과 무질서의 양상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안정의 부재가 국가에 대해 얼마나 유해로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안정은 모든 국가발전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곳에 올바른 건축물을 세울 수 없듯이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정치의 정착도, 경제적 번영의 성취도, 튼튼한 국방력 향상도, 그리고 민족문화의 창달도 어려운 것입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는 전진이 아닌 퇴보, 신뢰 아닌 불신, 화합 아닌 증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3개월에 걸쳐 가졌던 계엄은 바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은 국민의 능동적인 의지와 참여 속에서 이룩될 때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며, 물리적 수단으로 이를 확보해야 하는 사태가 자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안정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정유지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안정유지의 수단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계엄해제가 담고 있는 진정한 뜻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시대, 새 역사, 새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도 새 시대의 정신이 투철하게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튼튼한 생존과 거래의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더없이 긴요한 안정을 우리가 물리적

수단에 의하여 확보하는 사태는 이제 없어야 하겠습니다. 안정을 해치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일에 우리 겨레의 소중한 정력과 귀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정을 확고한 우리와 체질로 승화시키는 데 우리 힘을 모읍시다. 안정에 대한 결의와 열망에 차 있는 국민, 그리고 안정을 지킬 각오와 능력이 있는 정부가 있기에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소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